



이재명대통령과이시바시게루일본총리가 23일(현지시간) 일본 도쿄 총리관에서한일 공동언론발표회를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이 대통령-이시바, 과거사 제외하고 미래지향적 협력 '맞손'

23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은 양국 정상이 미래 지향적인 한일 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하며 정상 간 '셔틀 외교'를 재개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정상회담 후 '공동언론발표문'도 채택했다. 한일 정상이 문서 형태로 합의된 공동 결과를 발표한 것은 2008년 이명박 정부 이후 17년 만이다. 한일 정상이 수교 60주년을 맞아 관계 강화 방침을 명확히 한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일 양국은 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이자,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공동 과제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중요한 파트너"라며 두 나라의 긴밀한 협력을 거듭 강조했다. 일본 정부가 최우선 과제로 내건 남북 피해자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도 "납치 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며 지지를 표명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21세기의 새로운 한일

"미래지향적·상호호혜적 공동 이익 위해 함께 협력"
 이시바 'DJ-오부치 선언' 언급... '과거사' 의제선 제외
 '셔틀외교' 재개... 6월 캐나다 이후 2개월만 두번째 회담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계승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 선언에는 '식민 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사죄'가 명기돼 있다. 그러나 이시바 총리는 강제징용 등에 대한 직접 사과 언급은 하지 않았다.

◆한일 정상 과거사-미래 분리 '투트랙' 기조 재확인
 한일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과거사와 미래 의제를 분리하는 '투트랙' 기조를 재확인하면서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위한 협력 방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했다.

두 정상은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에 대해 파트너인 한일 양국이 미래지향적이고, 상호호혜적인 공동의 이익을 위해 함께 협

력해 나아가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면서 경제, 안보, 사회, 문화, 환경 등 제반 분야에서 상호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실질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수소·인공지능(AI) 등 미래 산업 분야 협력을 더욱 확대하고, 저출산·고령화 등 양국이 공통으로 직면한 사회 문제 협력을 위한 당국 간 협업체를 출범하기로 했다.

안보 분야에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구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경제 분야와 관련해 의제 가능성

이 거론된 한국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사안이나 북극 항로 개척을 중심으로 한국·미국·일본·러시아·북한이 협력하는 방안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미래지향적 한일 협력 기조 속에 과거사 문제와 일본산 수산물 수입 문제 등 양국 간 민감한 현안은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이시바 총리는 1998년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고 밝혔다. 1998년 발표된 이 선언에서 오부치 게이조 당시 일본 총리는 "일본이 과거 한때 식민지 지배로 인하여 한국 국민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안겨주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여 이에 대하여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했다"고 표명했다.(2면에 계속) /뉴시스

광주·전남서 중대재해 사망 연 평균 43.7명

2022년~올 상반기 144개 사업장서 154명 숨져
 올 상반기에만 23명 사망... 전년 대비 35.3% 증가
 정부 '산재와의 전쟁'... 과징금 부과 등 제도 강화

정부가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광주와 전남지역 산업현장에서 매년 평균 43.7명의 근로자가 중대재해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에도 전년 대비 35.3% 증가한 23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 24일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알림'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1~6월) 광주·전남 144개 산업현장에서 154명이 중대재해로 목숨을 잃었다.

연도별 중대재해 사망자는 ▲2022년 48명(광주 12명·전남 36명) ▲2023년 41명(8명·33명) ▲2024년 42명(4명·38명)이다. 한 해 평균 43.7명의 근로자가 일터로 출근했다가 집으로 되돌아오지 못한 것이다.

올 상반기에도 23명(광주 4명·전남 19명)이 중대재해로 숨졌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사망자 17명(2명·15명)에 비해 35.3%(6명) 증가한 수치다.

정부는 반복되는 산업현장에서의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 산재가 발생한 기업에 대한 과징금 제도 도입 등 제재 강화에 나섰다.

정부는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다수·반복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범위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까지 확대, 대규모 사업장부터 안전보건공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장 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원청 노사뿐 아니라 하청업체 노사가 지 참여시키는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관리체계'도 구축한다.

사업자에 대한 제재와 의무 강화에 더해 정부의 산재 예방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산재 예방과 직결된 필수 장비와 안전인력 지원을 확대, 노동자의 작업중지 권한과 야간 노동규율 강화도 검토한다.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재해조사 의견서 공개 근거를 마련하고 명예 산업안전감독관 위촉과 특별감독 참여 의무화도 병행한다.

정부와 노동 당국 기조에 맞춰 광주시와 전남도도 관련 정책을 논의하고 있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고 특별사법경찰관에 근로감독 권한을 부여, 임금 체불 방지 대책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노동계는 정부의 방침을 환영하면서도 영세한 사업장에 대한 예산 지원과 충분한 제도 기간 부여 등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종욱 민주노동당 광주본부장은 "정부가 최근 발표한 경제성장 전략을 긍정적인 방향이라 보고 있다"며 "건설 현장 등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영업정지 처분에도 행정소송을 통해 회사를 운영하는 법의 허점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전광춘 기자

전남도, 응급실 이용 도민 대상 의료만족도 첫 조사

전남도는 9월5일까지 지역 응급의료 기관 38곳의 응급실 이용객을 대상으로 2025 응급의료 만족도 조사를 한다고 24일 밝혔다.

전남도 차원의 응급의료 만족도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응급실 이용 실태와 문제점 등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조사, 2026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은 응급의료기관 38곳을 이용하는 20세 이상 80세 미만 도민 1500여

명이다. 조사 항목은 응급의료 정책 인지도와 신뢰도, 응급실 이용 경험과 만족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 등이다. 전문 조사원이 응급실 현장을 찾아가 도민과 1대1 면담 방식으로 진행한다.

전남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응급실 진료 환경 개선, 응급환자 안전 강화, 응급의료 신뢰도 제고 등을 추진해 도민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응급의료 체계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염선호 기자

철근 가공 및 도소매

이형봉강 · 철근공장 가공 커플러 shop-DWG

광주광역시 광산구 빛그린동로 134
 T 062-716-3488 F 062-716-5888
 E sambu6488@naver.com W sambu6488 / 1234

삼부철강(주)